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셧다운) 美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향후 전망 2
- 2026년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 의료·복지·이민 예산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

₩ 경제통상 동향

- (무역협정) EU, 미-EU 무역협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 추진 4
- (상호관세) 대법원 구두 변론 이후, IEEPA 근거 관세 관련 소송 3건 추가 접수 5
- (반도체) 중국 AI기업, 엔비디아 칩 미국 수출 규제 우회 인도네시아 활용 6

⚖️ 의회법안 동향

- 인공지능, USMCA, 수출통제 등 상하원 법안 5건 7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8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9

▣ 워싱턴 D.C. 주요일정

11.14(금)	•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Core PPI)
11.17(월)	•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설문조사 (Empire State manufacturing survey)
11.18(화)	• 10월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
11.19(수)	• 10월 연준 이사회 FOMC 회의록(Minutes of Fed's October FOMC meeting)

◎ 워싱턴 D.C. 포커스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및 향후 전망

1. 진행 경과

□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10.1)

- 9월 30일 미 연방정부 자금 소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협상 도출에 실패하며 10월 1일부로 정부 셧다운
 - 민주당은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 및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철회를 주장,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삭감안을 고수하며 최종 협상 결렬
 - 이로 인해 비필수 정부기관 부분 폐쇄, 일부 복지·공공 서비스 중단, 약 143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또는 무급 근로 상태에 돌입하는 정부 셧다운 개시

□ 미 상원,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합의안 가결(11.10)

- 셧다운 40일 차, 미 상원, 민주당 8명*의 찬성 확보로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 (60표)을 충족하고, 초당적 단기 예산합의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가결
 - * 팀 케인(버지니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재키 로젠(이상 네바다), 진 샤헨·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리처드 더빈(일리노이), 앵거스 킹(메인) 등 총 8명
- 60:40으로 통과된 예산합의안에는 △'26년 1월 30일까지 단기 정부 운영 자금 연장, △국방·보건·농식품·입법 등 '26년 회계연도 핵심 예산 확보, △연방 공무원 복직 및 급여 보장, 추가 해고 방지, △식량 지원 프로그램 재개 등 포함

□ 미 하원 예산합의안 최종 통과(11.12, 현지시각 밤 8시 30분)

- 미 하원이 상원이 가결한 단기 예산합의안을 하원 본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 셧다운 공식적으로 종료
- 하원은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현지시각 밤 9시 45분)함에 따라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2. 향후 전망

□ 셧다운은 종료되었으나 정치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의 충격은 여전히 상존

- 양당의 초당적 예산합의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었으나, 의료·복지·이민 예산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 재점화 가능성 다대
 - 공화당은 ‘국방 및 필수 인프라 예산 등 후속 협상 재개’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의료보조금(ACA)과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제외된 미봉책’이라며 반발
 -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전체 예산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로, 국방·보건·국토안보 등 핵심 부문에서 정치적 갈등 심화 우려 제기
-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 사태는 미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 초래
 - 셧다운으로 정부 부채는 연간 약 1.8조 달러 증가, 전체 부채 규모가 38조 달러로 증가, 주당 14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는 비용 손실 초래
 - 6주간의 셧다운으로 인한 영구적 경제 손실은 약 110억 달러로 추산, 항공 지연 및 취소, 연방 데이터 공백 등 후속 경제 피해 및 연방 데이터(고용·물가 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 셧다운 종료로 연방정부의 업무가 점진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각 부처별 행정 절차 및 예산 집행에 따른 업무 지연 불가피 전망

- 동 예산안은 ’26년 1월 30일까지의 지금 확보로, 의회와 행정부가 전체 또는 추가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 가능성 상존
- * ▲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 여부, ▲ 2026 회계연도 본예산 협상, ▲ 복지·국방 예산 균형조정 등 후속 입법·예산 협의는 12월 초 재개될 예정
- 본예산 협상 및 관련 입법 절차가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회 양당 간 정치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로이터통신(11.13), 블룸버그(11.13), 뉴욕타임스(11.13)

(무역협정) EU, 미-EU 무역협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 마련 추진

• (개요) EU, '25년 미-EU 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분야 실행계획 마련

- EU 집행위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관세·시장 접근 ▲표준·디지털 무역 ▲기술 장벽 ▲철강·알루미늄 협력 ▲경제안보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추진
- 동 계획은 미국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EU 통상 담당 집행 책임자의 금월 말 방미 일정에 맞춰 양측 간 조율이 본격화될 전망

• (상세) 관세·비관세장벽·철강 및 알루미늄·경제안보 중심의 이행조치 구성

- (관세·시장접근) EU는 와인·주류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표준·디지털무역·기술장벽 분야에서는 양측 간 정례협의 채널 신설 추진
- (철강·알루미늄) 미국의 50% 고율관세가 15% 관세 상한 합의를 잠식할 우려가 제기되며, EU는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할 예정
- (경제안보) 투자심사·수출통제·공공조달·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워킹그룹 신설과 LNG·반도체 분야 전략적 구매·투자 이행 모니터링 체계가 포함될 예정

• (전망) EU는 협정 이행 강화, 미국은 규제 개정 및 집행력 확보 요구 중점

- EU는 15% 관세 상한의 적용 명확화와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협정 실효성 제고를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EU 규제로 인한 자국 기업의 불이익 해소를 요구하여, 향후 협상에서 규제 정합성과 시장 접근 조건에 대한 조율 불가피 전망
- 양측 모두 경제안보·공급망·핵심전략산업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실행 계획을 기반으로 한 후속 협상은 단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동 실행계획은 아직 미국 측과 공유되지 않았으며, EU는 회원국 대상 비공개 설명을 진행 중으로, 미국 상무장관은 11.24일 EU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블룸버그(11.12)

(상호 관세) 대법원 구두 변론 이후, IEEPA 근거 관세 관련 소송 3건 추가 접수

- (개요)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근거 관세 관련 소송 3건 접수

- 델몬트 프레시 프로듀스와 2개 수입업체가 공동으로 CIT에 한 건의 소송 제기

- 추가로 수입업체 턴5 및 네투노 USA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 총 3건의 추가 소송 접수

- 11월 5일 IEEPA 관세 구두 변론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직후, 소송이 잇따라 접수

- * 이노베이티브 아이웨어와 7개 회사가 11월 12일 날 추가로 CIT에 소송 제기

- (상세) 소송 당사자들은 IEEPA 관세의 불법적 부과 주장

- 턴5는 대법원이 IEEPA 관세 및 관련 행정명령을 위법으로 판결해도 이미 납부한 관세는 별도의 법적 구제 없이는 환급받기 어렵다고 지적

- 델몬트는 소장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통합관세표 수정 권한만 부여할 뿐, 신규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 델몬트는 제604조와 제301조 법적 해석에 대해, 제604조는 단순 통합관세표 개선 권한이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제301조 역시 대통령 권한 위임 가능 규정일 뿐이라고 소송 측은 주장

- (반응) 대법원 판결의 파장 및 추가 소송 전망

- 전문가들은 IEEPA 대법원 판결이 CIT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것 분석

- 업계 안팎에서 유사 소송 제기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기범
-------	------------------

▪ 자료원	Trade Law Daily (11.7), 로이터(11.5)
-------	---

(반도체) 중국 AI기업, 엔비디아 칩 미국 수출 규제 우회 인도네시아 활용

- (개요) WSJ, 중국 AI기업의 엔비디아 칩 단반도체 우회 접근 사례 집중 보도
 - 트럼프 행정부는 2022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이 중국에 직접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시행 중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테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서버를 확보, 현지 데이터센터에서 운용을 개시
- (상세) 복수 국가 및 기업 지분 구조와 클라우드 활용 통한 칩 우회 거래 확인
 - 엔비디아는 실리콘밸리 기업 Aivres를 통해 칩을 공급했으며,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인스퍼가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통신사 Indosat은 미국 협력사를 통해 32대의 서버(총 2,300개 Blackwell 칩)를 약 1억 달러에 매입, 최종적으로 상하이 AI 스타트업 INF Tech에 서비스 제공
 - INF Tech는 재무·헬스케어 AI 개발 목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직접 칩이나 서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중심으로 사용
 - 현지는 현행 규정이 물리적 칩 수출만 제한해, 글로벌 클라우드나 임대 협력 구조를 통한 우회 가능성이 커진 점이 문제로 지적, AI 개발 및 서비스 인프라의 임대 또는 비합작 형태가 새로운 수출관리 정책 논란으로 부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WSJ (11.12)

주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인공 지능 (11.6)	S.3150 (상) (11.6)	Jim Banks (공)	<p>〈AI 반도체 수출 관리 강화 법 GAIN AI Act of 2025 (“Guaranteeing Access and Innovation for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려국(concern countries)에 AI 반도체 수출 기업은 미국 내 인사(법인) 해당 반도체 확보에 우선권 인증 ▪ 비우려국 수출 시, 미국 신뢰기관(trusted U.S. person)의 관리하 적용 시 면허 의무 면제 가능 ▪ AI 기술 공급망 전략적 통제 강화
USMCA (무역) (11.7)	H.R.5926 (하) (11.7)	Jodey Arrington (공)	<p>〈멕시코 에너지 우대조치 시정 촉구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TR, CFE·PEMEX 우대조치에 따른 USMCA 분쟁해결 패널 요청 및 1974년 무역법 조사 요구 ▪ 멕시코 국영기업 자의적 지원이 美 기업 경쟁 저해 우려 반영
수출 통제 (11.7)	H.R.5955 (하) (11.7)	Sydney Kamlager-Dove (민)	<p>〈수출허가 수수료 부과 금지 및 환급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허가 발급 관련 부과된 모든 수수료 징수 및 사용 금지, 이미 납부된 금액은 허가 보유자에게 환급 규정 ▪ 행정부의 수출절차 관련 비용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재정 징수 방지 목표
De Minimis (소액 면세) (11.7)	H.R.5960 (하) (11.7)	Kimberlyn King-Hinds (공)	<p>〈‘일부 지역’ 원산 수입품에 대한 디미니미스(소액면세) 특례 영구화 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일부 지역’ 구체적 명칭 비공개, 무역경쟁 심화 속 우회수입 및 소액특례 제도 악용 방지 추가 조치 논의
지속 예산 결의안 (11.12)	H.R.5371 (하) (11.10)	Tom Cole (공)	<p>〈지속 예산 법안 및 결의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하원 통과로 정부 셧다운 종료, 대통령 서명 완료 ▪ 동 법안은 정부 예산 집행기한을 2027년 1월 30일까지 연장, 농업부·입법부·국방부·보훈부 등 주요 예산 항목을 묶은 ‘미니버스’ 형태로 전환 ▪ 상원, 미니버스 결합 CR로 협상 주도권 확보 및 하원 양보 여지 축소 전망
	H.Res.873 (하) (11.12)	Michelle Ficshbach (공)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3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u>Verizon to Cut About 15,000 Jobs</u> (美통신사 버라이즌, 만 5천 명 이상 해고 예정)</p> <p>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은 치열해지는 경쟁 시장에서 비용을 줄이고자 약 1만 5천명 직원을 차주에 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밝혀</p>
The Washington Post	<p><u>What the end of the government shutdown means for you</u> (셧다운 종료, 무엇이 복귀 되나)</p> <p>미 정부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이 43일만에 종료되면서 연방 직원들이 일자리로 복귀할 예정이며 박물관,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항공편 등이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p>
The New York Times	<p><u>Trump Administration Expected to Drastically Cut Housing Grants</u> (트럼프 행정부,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 대폭 감축 예정)</p> <p>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주거 지원을 축소하고 노숙자 정책을 전면 재편 예정, 최대 17만 명의 과거 노숙인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제기</p>
Reuters	<p><u>USDA searched for terms like 'diversity,' 'climate modeling' to target grants for cancellation</u> (미 농무부, “다양성”, “기후 모델링”등 용어 특정해 보조금 축소)</p> <p>트럼프 행정부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지침에 따라 미 농무부는 ‘다양성’, ‘탄소 가격’ 등 용어가 포함된 보조금 총 30억 달러 규모, 600개 축소</p>
Bloomberg	<p><u>Airlines Knocked Sideways by Shutdown Are Getting Back on Track</u> (셧다운으로 중단된 하늘길 다시 열린다)</p> <p>미국 항공사들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여행 대혼란을 해소하고, 추수감사절 성수기 전 운항 노선을 재정비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 기울여</p>

* 미국 동부 시간 11월 13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39	미국 중·대형 트럭 신규 관세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10월
US25-38	美 무역전쟁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5.10월
US25-37	美 특허의약품 관세 정책 추진 및 제약사별 대응 동향	2025.10월
US25-36	미국 정부의 관세 위반 단속 강화 추세와 향후 전망	2025.09월
US25-35	미국 연준 금리 인하 발표 및 하반기 경제 전망 변화	2025.09월
US25-34	'25년 2분기 美 청정에너지 투자 동향과 정책 환경 영향	2025.09월
US25-33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9월
US25-32	트럼프 관세로 인한 미국 무역 구조 변화 ('25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2025.08월
US25-31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자립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30	미 풀리실리콘 232조 조사 관련 의견수렴 주요 내용	2025.08월
US25-29	美 미소기준(De Minimis) 면세 중단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8월
US25-28	美 정부 『AI 행동계획』 행정명령 발효 - 주요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8월
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7월
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2025.07월
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7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3 (2025.8.26.)	 워싱턴 통상 전문 변호사 가론 美 신정부 통상정책 대응책은?	
코인사-22 (2025.5.13.)	 미국 통상 전문가가 예측한 트럼프 2기 글로벌 경제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